

불간섭 정책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논쟁과 실용주의적 접근*

강수정**

| 목 차 |

I. 서론	지식인들의 논쟁
II. 중국의 불간섭 원칙의 역사와 논쟁의 배경	IV. 불간섭 정책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과 합법적 개입의 조건
III. 불간섭 원칙과 정책에 관한 중국	V. 결론

| 논문요약 |

‘불간섭(不干涉)’은 중국이 1950년대 초부터 고수해 온 가장 중요한 외교원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국제적 개입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었고, 불간섭 정책의 유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 국내외에서 논쟁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을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내부에 크게 세 가지의 입장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첫째는 중국의 불간섭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비판적 입장이고, 둘째는 기존의 원칙과 정책은 여전히 중국에게 유익하며 계속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고, 셋째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은 고수하되 그 실행과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은 점차 세 번째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논쟁의 초점은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되 어떻게 그 원칙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제고할 것인가’에 맞춰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5911).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국가이익과 국내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국제적 개입의 조건과 방식을 모색하는 보다 광범위한 외교전략적 논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중국, 불간섭, 국제적 개입, 강대국, 외교정책

I. 서론

‘불간섭(不干涉, non-interference)’은 중국이 1950년대 초부터 국제관계에서 강조해 온 가장 중요한 외교원칙 중 하나이다. 불간섭은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영토 보전과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하나로, 타국의 국내관할권(domestic jurisdiction)에 해당하는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²⁾ 중국은 이러한 원칙이 독립된 주권국가들이 강대국들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대내 정책을 수행하는 국제질서 상(像)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950년대에 이러한 외교원칙이 중국 외교에서 처음 대두되었을 때에는 ‘불간섭’보다는 ‘평화공존’이 그 핵심이었지만, 이후 중국학자들과 관료들이 중국의 불간섭 외교정책을 정당화하고 중국의 내정(內政)에 대한 강대국들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불간섭 원칙을 자주 언급하면서, ‘불간섭’은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원칙으로 자리 잡았다.³⁾ 그렇게 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불간섭 원칙의 주창자이자 수호자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과 함께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국제적 개입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었고, 중국의 불간섭 정책의 유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 국내외에서 논쟁이 대두되기 시

2) 본 논문에서 불간섭원칙은 내정불간섭원칙을 의미하며, 두 용어를 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劉蕊(2009)의 연구 참조.

3) Wen, Jiabao (2004), “Carrying Forward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in the Promotion of Peace and Development,” https://www.fmprc.gov.cn/mfa_eng/topics_665678/seminaronfiveprinciples_665898/t140777.shtml. (2019년 9월 16일 검색)

작했다(Pang 2009; Godement 2013; Chen 2016; 曾愛平 2016; Sørensen 2019). 중국정부는 국제정치에서 여전히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외교적 수사에서 빈번하게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내부에 그러한 정책의 유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연웨이통(閻學通)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학자들 중에 내정불간섭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New York Times* 2011/04/01).

이처럼 중국의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서, 불간섭 원칙과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지향은 가장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중국 외교에서 불간섭 원칙과 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둘러싼 중국 내 논쟁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외교정책 변화의 배경 정도로만 언급되어 왔다(이동률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불간섭 원칙과 정책에 관한 중국 국내외 논쟁을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에 주목한다. 중국 지식인들의 논제와 논평에 대한 문헌 분석과 중국 국제정치학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불간섭 원칙과 정책에 관한 중국 내부의 인식과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을 연구하는 것의 학문적 유용성을 논하면서, 중국 지식인들의 견해가 반드시 중국정부나 정치지도자들의 인식과 주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인식과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⁴⁾ 하지만 중국 내 담론 생산층인 지식인들의 논쟁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 내부 인식과 담론의 스펙트럼을 이

4) 과거 중국의 대외정책은 폐쇄적 구조 속에서 소수의 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점차 분권화·다원화되면서 각종 당정 기관들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정부, 싱크탱크 연구기관, 지식인들, 기업 및 이익단체, 언론, 대중여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문기 2014). 비록 이러한 다원적인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당정 최고위 지도부뿐만 아니라 다원적 행위자들의 개입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외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조언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대외정책 관련 담론 형성과 확산에서 중국지도부 및 정치엘리트들과 연결망을 가지는 싱크탱크 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중국 내부에 어떠한 담론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한 서로 다른 담론들 사이에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담론들 사이에 어떠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내부 인식과 담론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것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국가이익, 국제적 지위와 역할에 부응하여 외교전략과 정책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가능한 선택지들과 그에 따른 조건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즉, 중국 지식인들의 관점과 주장을 담은 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내부의 서로 다른 인식과 담론들을 살펴보는 연구는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경향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창구를 제공한다(Zhu 2010, 57; Aldlen & Large 2015, 126-27).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학계와 당정 산하 싱크탱크 연구기관의 학자·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중국 외교에서 불간섭 정책과 국제적 개입에 관한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즉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어떠한 담론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담론들은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중국의 불간섭 원칙의 역사와 이러한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대두된 배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중국 지식인들의 관련 논저와 논평들에 대한 문헌 분석과 중국 국제정치학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불간섭 원칙과 정책에 관한 중국 지식인들의 논쟁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입장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첫째는 중국의 불간섭 정책의 변화(수정 혹은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비판적 입장이고, 둘째는 기존의 원칙과 정책은 여전히 중국에게 유익하며 계속해서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고, 셋째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은 고수하되 그 실행과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이 점차 세 번째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중국의 불간섭 원칙과 정책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쟁은 ‘불간섭 원칙을 폐기할 것인가, 고수할 것인가’의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되 어떻게 그 원칙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확장되는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제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끝으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과 합법적인 개입의 방식과 조건에 대한 중국 학계 논의의 주요한 내용과 경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불간섭 정책을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논쟁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국가이익과 국내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국제적 개입의 조건과 방식을 모색하는 보다 광범위한 외교전략적 논의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중국의 불간섭 원칙의 역사와 논쟁의 배경

중국은 오랜 기간 국제관계에서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불간섭 정책을 고수해 왔다. 불간섭 원칙이 중국 외교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1950년 2월 14일 중국과 소련 양국이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에서였다. 이 조약의 제5조에서 양국은 평화, 호혜,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과 함께, 내정불간섭을 양국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천명했다. 이후 불간섭 원칙이 평화공존 5원칙의 하나로 공식 제기된 것은 1953년 중-인회담에서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인도대표단 접견 시 평화공존 5원칙을 처음 언급하면서부터였다. 1954년 중국은 최초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로 평화공존 5원칙을 명시하였다. 이후 평화공존 5원칙은 1954년 4월 29일 중국과 인도가 체결한 ‘티베트지방-인도 통상교통협정’에 삽입되었으며, 1954년 6월 28일 인도를 방문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인도 네루 수상의 공동성명에서 공식 선언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평화공존 5원칙을 중국과 인도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저우언라이 총리와 네루 수상은 평화공존 5원칙을 바탕으로 이른바 ‘반둥회의 평화 10원칙’⁵⁾을

5) 반둥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23개, 아프리카 6개 등 총 29개 국이었으며, 주요 참가

공표하였다.

이후 중소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불간섭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소련과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그들의 간섭을 거부하면서 제3세계 신생국들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들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982년에 수정된 헌법에서도 평화공존 5원칙을 다시 명기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이 개혁개방 이후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수립·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중국의 불간섭 원칙은 탈냉전과 개혁개방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로 자리를 잡았고, 현재까지 중국 외교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자 주요한 외교적 수사로서 활용되고 있다.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한층 더 강조하면서 중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간섭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고, 서방 국가들의 국제적 개입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중국은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간섭에 대응해 왔다. 또한, 중국은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아시아-아프리카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은 이러한 원칙을 국가이익에 따라 외교활동 및 대외원조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국은 중국, 인도, 일본, 이집트, 터키, 태국, 필리핀, 리비아, 알제리, 가나, 에티오피아, 수단 등이었다. 이 회의는 서유럽과 북미 열강의 식민주의를 타파하고, 미국과 당시 구소련이 주도한 냉전 상황에서 중립을 선언해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이 회의는 식민주의, 미국-소련 냉전체제를 비판하고 비동맹주의와 중립주의, 상호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국제연합 헌장의 여러 원칙에다 1954년 중국과 인도가 합의한 평화 5원칙을 보강한 '평화 10원칙'을 선언했다. 평화 10원칙의 주요 내용은 기본 인권 존중, 주권과 영토 보전, 인종 및 국가 사이의 평등, 내정 불간섭, 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군사동맹에의 불참, 상호 불가침,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 상호협력 촉진 등이다. 현재까지 UN과 여러 국제기구, 제3세계 국가들의 외교를 지배하는 중심 이념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활용해 왔다. 정치적 박해와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안고 있는 수단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불간섭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처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난 중국은 1990년대 심화된 개혁을 통해 세계화 추세에 합류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다. 현재,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종합 국력을 축적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지역 강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에게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스스로도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제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중국의 국제문제 개입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의 확대는 건국 이후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고수해 온 ‘불간섭 원칙’과의 충돌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陳琪·黃宇興 2009; 朱世龍·劉宣佑 2009; 張忠祥 2010; 吳京 2012; 王逸舟 2013a; 高凜 2015; 曾愛平 2016; 馮維江 2018). 이에 따라, 중국 국내외에서는 ‘21세기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게도 불간섭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규범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개입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국의 불간섭 정책의 유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 국내외에서 논쟁이 대두되었다(曾愛平 2016). 따라서 이러한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논쟁의 배경이 되는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국내외에서 불간섭 원칙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추동했던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해외투자·진출확대(走出去) 전략에 따른 해외이익의 확장이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원자재, 에너지자원,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중국인들의 해외 진

출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전략적·상업적 국가이익이 해외로 확장되었다(劉蓮蓮 2017; 陳積敏 2014; 肖晞·郎帥 2015; 李衆敏 2012; 王發龍 2014; 凌勝利 2018; 郎帥·楊立志 2016).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 이후, 중국은 수출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90년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과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중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의 통합은 국제운송로에 대한 중국의 의존성을 증가시켰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제조업 부문이 급속하게 확장되면서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국내 자원만으로는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중국은 2013년 무역규모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무역대국으로 올라섰고, 2010년 이후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2016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ODI)는 전 세계 O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에 달하며, 2015년 이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외직접투자실행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세계경제와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불안정한 지역에 진출하면서, 이 지역의 국내적 혼란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분쟁의 위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수단, 남수단, 나이지리아, 리비아, 예만 등과 같이 내전을 겪은 국가들에 진출했던 중국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은 납치, 살해, 폭력, 강제추방의 위협에 노출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진출한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펴야 한다는 국내적 요구가 증가하였고, 해외로 확장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중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둘째,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규범적 발전은 국가주권을 최우선시하던

규범적 전통에 도전하면서, 인권에 더 강조점을 두는 ‘포스트 베스트팔렌’ 국제질서가 대두되었다(楊澤偉 2012; 陳拯·朱宇軒 2015; 羅艷華 2014; 潘亞玲 2016). 사실 ‘불간섭 원칙’은 하나의 국제규범이며,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국제사회에서 주권이 강조되면서 불간섭 원칙도 함께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민주와 인권이 우선시되면서, 이러한 규범들이 국가주권과 불간섭 원칙보다 더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 흐름 속에서, 국제 무역에서의 자유무역주의, 국내 정치에서의 민주화를 통한 권위주의 타파 및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확립, 그리고 인권 및 인도주의 원조의 정당성 옹호는 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현재의 국제규범질서는 서구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가치와 규범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국제질서에서 자유주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흐름은 근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가주권과 국가 간 평등을 강조하는 흐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최근에 나타난 흐름으로 도덕적 보편주의(moral universalism)에 초점이 맞춰졌다(Ikenberry 2011).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국가들로 구성된 근대 국제정치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체제에서 국가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것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 사회·정치·경제체제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다른 국가들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불간섭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는 것을 의미했다(Ginsburg 2010). 자유주의의 두 번째 흐름은 20세기에 미국의 주도로 나타났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도덕적 보편주의 규범들이 도입되었다. 1898년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 이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목표는 미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는 인권 보호가 민주주의 확산과 함께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았다(Smith 2012).

탈냉전 이후,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은 국제사회의 규범적 발전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자유주

의적 가치를 강조하고,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의 확산을 지지해 왔다.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 세계적 확산이 추진되면서, 보편 인권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들이 국제정치 담론에서 널리 통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규범들은 유엔인권위원회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제도화되었고, 국제사회가 특정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덕적 의무를 부여했다(Etzioni 2011).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범적 발전은 국가주권에 대한 베스트팔렌 규범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베스트팔렌 주권은 ‘포스트 베스트팔렌’ 국제질서 속에서 약화되어 왔으며, 인권에 대한 강조는 시민들에 대한 국내적 처우와 같은 국내문제가 더 중요한 국제적 관심 사항이 될 수 있게 했다(Ginsburg 2010).

셋째,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에게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문제 해결에 대한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탈냉전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는 자유무역,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규범의 전 세계적 확산(diffusion)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더 본격적으로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고, 그 체제 안에서 자유무역, 대외개방, 시장경제의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면서 대외수출경제를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편입과 국제규범 사회화 과정에서, 중국은 자유무역의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자유주의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국제적 확산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혜자들 중 하나이지만 그러한 질서를 수호하고 확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참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질서에 ‘무임승차’해 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국제사회의 ‘보호책임’과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련한 국제적 개입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중국은 1950년대 이후 주요한 외교원칙 중 하나로 내정불간섭을 강조하면서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이 강대국으

로서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분담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2005년 당시 미국 국무부 부부장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은 중국이 단순히 자유주의 국제체제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이자 보다 적극적인 기여자(contributor)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⁶⁾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 국가이미지의 제고가 중국 외교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負責任的大國)’으로서의 역할과 국가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UN의 평화유지 활동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기존의 국제 규범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체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적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Ⅲ. 불간섭 원칙과 정책에 관한 중국 지식인들의 논쟁

앞서 살펴본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국제적 개입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었고, 불간섭 정책의 유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 국내외에서 논쟁이 대두되었다. 본 장은 이러한 논쟁을 둘러싼 중국 내부 인식과 담론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담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 어떠한 인식과 담론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중국 정치학자들과 전문가들, 평론가들의 관련 논문과 저서, 기고문, 칼럼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진행한다. 문헌에 담기지 못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들은 중국 현지조사를 통한 중국 국제정

6) Zoellick, Robert B. (2005),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https://2001-2009.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 (2019년 9월 16일 검색)

치학자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보충하였다.⁷⁾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의 불간섭 정책에 관한 논쟁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첫째는 기존 불간섭 정책의 변화(수정 혹은 폐기)와 국제적 개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비판적 입장이고, 둘째는 기존의 원칙과 정책은 여전히 중국에게 유익하며 계속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며, 셋째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은 고수하되 그 실행과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1. 불간섭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비판적 입장

중국에서 불간섭 정책에 대한 비판이 처음 제기된 것은 시사잡지와 인터넷 블로그들을 통해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터였다. 불간섭 정책에 비판적인 이들은 중국정부의 수동적인 불간섭 정책이 다양한 지역에서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해외이익을 수호하는 데 심각한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불간섭 원칙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중국정부가 국익 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가 수단, 남수단, 리비아, 미얀마와 같이 국내 상황이 불안정한 국가들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유명한 시사평론가인 치우린(邱林)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중국정부의 수동적인 불간섭 정책으로 인해 미얀마의 정치적 격변기에 중국이 수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⁸⁾

또한,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의 “조건 없는(no strings attached)” 대외원

7) 2017년 1월과 2019년 6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현지조사를 시행했으며, 이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과 싱크탱크 연구기관의 국제정치학자 및 관련 전문가 21명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 진술된 내용에 대한 익명보장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지하였고, 녹취록이 작성된 후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인명, 소속 등의 자료는 코드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8) 邱林 (2013), “中國丟掉緬甸是捱不住的現實難題,” <http://qiulin.blog.caixin.com/archives/57998>. (2019년 9월 16일 검색)

조, 무역, 투자가 그 지역 국가들의 호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간섭 정책의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의 정치적 조건 없는 투자와 지원이 일반 시민들보다는 독재국가의 통치자들에게만 유용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고, 중국정부의 조건 없는 원조 정책의 유지는 그러한 독재자들의 학살, 인권 유린과 같은 범죄행위를 묵인 혹은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 중국 최대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차이나의 모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는 수단의 석유 산업에 투자한 자금이 수단 정부의 무기 구매 자금으로 유용돼 다르푸르 학살에 쓰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왔다(『Economy Insight』 2014/01/01). 중국의 영향력 있는 시사잡지인 『난평창(南風窗)』의 부편집장인 세이취우(謝奕秋)는 “어떤 국가들이 중국의 원조를 받아 그것을 범죄행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정부는 반드시 직접 개입하여 아프리카 정부들이 그러한 원조를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謝奕秋 2010).

이렇듯 중국 국내에서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오랜 기간 확고히 고수해 온 불간섭 원칙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지만, 특히 해외투자·진출확대(走出去)전략에 따른 중국의 해외이익 확장과 부상하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간섭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李伯軍 2014a; 李伯軍 2014b; 朱世龍·劉宣佑 2009).

국제사회의 규범적 발전도 불간섭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潘亞玲 2014).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불간섭 원칙을 강조해 온 것은 주권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중국은 청말(清末) 아편전쟁 이후 외국 열강들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반식민지화의 치욕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기억으로 인해 중국 지도자들은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왔다(Cohen 1967). 하지만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 보편인권,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고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고 다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문제 해결과 국제적 개입이 확대되었다(楊澤偉 2012; 李伯軍 2009a; 李伯軍 2009b). 주권의 약화는 전통적

으로 국가 고유의 관할권에 속했던 사항들이 이제 국제적 관할권에 속하게 됨을 의미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규범적 이해에서도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초국가적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이 더해졌고, 인권이 보다 강조되면서 국가주권을 책임으로 이해하는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이 등장하였다(Ruan 2012).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규범적 변화와 함께, 일부 중국학자들은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된 비서구 지역 기구들에서 주권과 불간섭에 대한 강조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지적해 왔다(『中國新聞周刊』 2012/01/16). 아프리카연합의 비방관주의(non-indifference) 독트린이나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의 군사쿠데타에 대한 국제적 개입의 필요성 주장, 아랍국가연합의 리비아와 시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 요구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불간섭 원칙이 더 이상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외교적 수사로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의 지역협력 노력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聯合早報』. 2010/06/24).

또한, 중국은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면서 수단, 짐바브웨 등 일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정치적 조건 없는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경제교류 및 무역관계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그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은 묵인해 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국제적 비난 속에서, 일부 중국학자들은 불간섭 원칙은 중국이 지향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負責任的大國)’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으며, 타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에 불간섭으로 일관하는 중국정부의 태도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국가들에게 중국을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왔을 뿐이라고 지적한다(朱世龍·劉宣佑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불간섭 원칙의 고수는 중국이 공공외교에도 심각한 장애물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王江波 2013). 나아가 일부 자유주의적 학자들은 인권과 민주적 가치의 확대는 저항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吳征宇 2005; 羅國強 2006; 王洪濤 2008; 毛國輝 2013). 결론적으로, 이들은 불간섭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대외정책은 중국의 국익에도 국제적 명성(국가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2. 불간섭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

중국의 불간섭 외교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간섭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여전히 중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詹世亮 2004; 蘇長和 2011; 吳興唐 2012; 李伯軍 2014a; 李伯軍 2014b; 儲殷·程立耕 2014; 『解放日報』 2011/04/25; 『解放日報』 2011/09/19; 『聯合早報』 2012/01/12; 『東方早報』 2011/03/29; 『人民日報』 2011/05/31; 『人民網』 2012/04/27; 『光明日報』 2012/05/22; 『解放日報』 2012/10/30; 『解放日報』 2013/12/10).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이들은 불간섭 원칙이 21세기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기존의 불간섭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 데에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불간섭 원칙은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기저에는 서구 강대국들이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거나 중국을 서구식 민주화 혹은 심지어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國際在線』 2012/02/21; 吳興唐 2012). 따라서 불간섭 원칙은 국가주권, 영토보전,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와 관련한 중국의 핵심이익과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光明日報』 2012/05/22; 黎鐸 2018). 불간섭 원칙을 중국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여기는 전·현직 외교관들과 고위 관료들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中國網新聞』 2017/12/11). 예를 들어, 전직 외교관이자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특별초빙 연구원인 안휘허우(安惠侯)는 불간섭 원칙의 폐기는 분란을 만들 뿐이고 중국의 국가주권과 핵심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解放日報』 2013/12/10).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런웨이동(任衛東)은 불간섭 원칙은 중국정부가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본주의의 바다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잠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무기’라고 주장한다(『人民日報, 海外版』 2013/06/14). 중국 내 불간섭 원칙의 지지자들은 서구 강대국들이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들어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하에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의 내전에 개입하여 체제전환(regime change)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 나토(NATO)군의 리비아 내전 개입은 이러한 의구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李伯軍 2009a; 李伯軍 2009b; 『學習時報』 2003/09/10; 『東方早報』 2011/03/29; 『解放日報』 2011/09/02; 『解放日報』 2011/09/19; 『人民日報, 海外版』 2012/05/31; 『中國國防報』 2012/02/21; 『解放日報』 2012/03/21; 『光明日報』 2012/05/22; 『人民日報』 2012/07/17; 『人民日報』 2014/07/31). 이들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내세워 중국정부의 불간섭 정책을 비판하고 중국에게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불간섭 원칙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서구의 시도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직 외교부 관료는 “불간섭 원칙을 폐기하라는 서방 국가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간다면, 장래에 누가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는가?”라고 경고하며 불간섭 원칙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光明日報』 2012/05/22).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과 주권의 원칙에 근거한다. 불간섭 원칙은 베스트팔렌 주권 개념의 핵심이다(Pan 2010). 중국은 서구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던 19세기에 주권의 개념을 처음 접했다. 제1, 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조는 서구 강대국들과 불평등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고 중국 내에서 외국인들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중국 근대사의 “치욕의 100년” 시기에 외국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은 중국으로 하여금 주권 수호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도록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사회주의 신중국의 건설뿐만 아니라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성립을 의미했다. 이후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국가주권의 수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1971년에 UN가입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중국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불간섭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중국인들은 주권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국내문제를 처리할 권리’로 본다. 덩샤오핑은 국가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결코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Deng

1993, 359). 중국은 한 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은 ‘주권 침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타이완 문제, 티벳과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구 국가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비판을 ‘용납할 수 없는 국가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주권의 수호는 중국이 불간섭 원칙을 고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의 불간섭 원칙은 주권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주권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그러한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 문제나 남·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분쟁, 다른 해양 및 영토 분쟁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한, 중국은 영토보전과 국가주권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요원하다. 국력 신장과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재통일에 대한 오랜 열망과 외부세력의 내정 간섭에 대한 우려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불간섭 원칙의 지지자들은 중국의 불간섭 원칙은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를 지향한다는 도덕적 약속이며, 이러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다수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解放日報』 2011/04/25; 吳興唐 2012; 姚匡乙 2012a). 이들은 이러한 원칙을 옹호하는 것은 서구의 개입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중국이 불간섭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불간섭 정책의 고수가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폐기한다면 자신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셋째, 불간섭 원칙의 폐기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평화로운 발전(和平發展)을 추구하겠다는 중국의 공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국이 능력 이상의 국제적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解放日報』 2011/04/25).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중국의 해외이익 보호가 반드시 타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국제적 개입이 확대될수록 서구 강대국들과의 분쟁의 위험은 커지고 주변국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蘇長和 2011; 儲殷·程立耕

2014). 이들은 주변국들이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개입주의적 태도를 반기거나 용인할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시한다. 상하이 푸단대학의 수창허 교수는 불간섭 정책은 중국이 자원을 국내 경제성장에 최대한 집중시키고 과도한 확장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解放日報』 2011/04/25). 다른 강대국들의 국제적 개입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국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 중국은 그에 동참하는 데 매우 난색을 표시해 왔다. 그럴 때마다 중국정부는 국제적 개입에 대한 중국의 불참이나 반대를 정당화하는 데 불간섭 원칙을 유용하게 활용해 왔다. 이처럼 불간섭 원칙의 지지자들은 중국이 기존의 불간섭 정책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정책 변화의 잠재적 비용이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불간섭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 상당수는 그러한 원칙이 중국의 외교정책에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정부는 불간섭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姚匡乙 2012b; 田文林 2017). 따라서 이들은 불간섭 원칙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해외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周鑫宇 2015). 불간섭 원칙의 확고한 지지자인 수창허 교수도 불간섭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실천에서는 창조적인 이해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蘇長和 2011, 40).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며, 조건 없는 원조를 제공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사 과정과 감독 메커니즘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불간섭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간섭 원칙은 다른 국가들과의 지역협력 및 공동이익의 추구하고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불간섭 정책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불간섭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면서 불간섭 원칙과 그 실행에서의 전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소장인 류중민(劉中民)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 외교적 실행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여 창조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東方早報』 2012/01/05; 劉中民 2016; 劉中民 2018; 劉中民·范鵬 2015). 중국해양대학의 귀페이칭(郭培清) 교수는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는 불간섭 원칙을 유지해야 하지만 전술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국내문제에 선택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郭培清 2007).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실용주의’에 근거하며,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에 있어서 불간섭 정책과 선택적 개입은 둘 다 중국정부에게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자 가능한 정책적 옵션들이며, 어떤 정책을 선호하느냐는 중국의 이익과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潘亞玲 2012).

불간섭 원칙에 대한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창조적 개입(創造性介入)’과 ‘건설적 개입(建設性介入)’이라는 개념이 가장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먼저, ‘건설적 개입’은 상하이 푸단대학의 자오화성(趙華勝) 교수가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제기되었다(趙華勝 2011). 그 논문은 2010년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에서 민족 간 유혈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불간섭 정책을 고수하면서 수수방관의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웃사이더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불간섭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중국의 외교적 수단들 중 하나로써 “개입”의 선택지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중국이 국제문제에서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陳拯 2013; 周士新 2013; 田文林 2017). 중앙정부 관료들도 연설문이나 기고문들에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2012년 당시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국 국장이었던 루샤예(盧沙野)는 중국이 직접 중재를 위해 특사를 파견하거나 UN 혹은 지역 기구의 중재 활동과 평화 작전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문제에 건설적으로 개입해 왔다고 주장한다.⁹⁾ 그에 따르면, 중국의 건설적 개입은 실제로 주권 존중, 동등한

9) 盧沙野 (2012), “中非新型戰略伙伴關係的几点思考,” <http://ias.zjnu.cn/2013/0122/c6147a116176/page.htm>. (2019년 9월 16일 검색)

입장에서의 자문, 평화와 공정한 대화 촉진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유사하게,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이저우(王逸舟) 교수는 ‘창조적 개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王逸舟 2011). 그는 다양한 저서, 논문, 기고문, 인터뷰들에서 중국의 불간섭 정책의 조정과 창조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이러한 ‘창조적 개입’의 개념은 학계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王逸舟 2010; 2011; 2012a; 2012b; 2012c; 2013a; 2013b; 2013c; 2015; 劉毅 2013; 2014; 章迪禹·王逸舟 2012; 丁吉林·連希蕊 2012; 『第一財經日報』 2011/12/30; 『環球時報』 2012/10/13).¹⁰⁾ 2011년 발표된 그의 저서에서, 왕 교수는 ‘창조적 개입’을 중국이 국제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새롭고 긍정적인 자세’이자 ‘중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규정한다(王逸舟 2011). 이러한 ‘창조적 개입’과 관련하여 그는 불간섭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국력에 비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국제적 평판과 소프트파워는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해외이익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다른 국가의 국내적 위기로 인해 급박한 위협에 놓였을 때, 중국의 전통적인 불간섭 정책과 도광양회(韜光養晦) 대외전략은 중국의 해외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창조적 개입’을 통해 중국 외교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한다. 중국이 기존에 일관적으로 추진해 온 불간섭 정책과 도광양회 대외전략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국제문제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공공재와 지역 공공재 제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소위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개입을 통해, 중국은 확장된 해외이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국제문제에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왕이저우 교수는 자신이 주장하는 ‘창조적 개입’이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

10) 왕이저우 교수의 ‘창조적 개입’ 논의에 관한 중국 학계의 평가와 호응은 다음을 참조. 袁正清(2011), 李明波(2011), 李欣(2011), 劉海方(2011), 王帆·凌勝利(2012), 叶淑蘭(2012), 尹繼武(2012), 何光强·宋秀踞(2013), 張春(2013), 李濱(2013), 黑維清(2013), 張志洲(2014), 廖澄澄(2014), 王俊生(2014), 談譚·陳劍峰(2015), 徐慶超(2016), 雷志華·烏元春(2015).

적인 참여를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간섭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Wang 2012). 불간섭 원칙의 핵심은 한 국가의 중요한 국내문제(정치체제, 국가안보, 통치방식, 정치지도자 선택과 관련된 문제)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이 중요한 국내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러한 개입은 불간섭 원칙의 위반이나 부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적 개입’은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적 개입’은 미국식 개입주의와 다르며, 그 실행에 있어서 세 가지—UN헌장 준수, 관련 당사국의 동의, UN 및 지역 기구, 주변국들로부터의 지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한다(*Beijing Review* 2012/03/05). 또한, ‘창조적 개입’은 중국의 중요이익과 관련되었을 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에 대한 고려와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요약하자면, 왕 교수의 ‘창조적 개입’은 중국이 불간섭 원칙을 보완하는 유연한 개입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불간섭 정책을 확장하여 중국의 확대되는 해외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창조적 개입’에 적절한 분야로는 해양, 극지방, 우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다자기구를 통한 평화유지활동, 비전통 안보 위협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등이 있다. 또한, 왕 교수는 이러한 ‘창조적 개입’을 통해 중국이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교정책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왕이저우 교수가 『창조적 개입』이라는 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그의 관점에 동조했고, “중국이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조적 개입을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중국 외교의 전략적 사고와 실천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며 지금은 실용주의적이고 부분적인 정책 조정을 시작할 때

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Beijing Review* 2011/12/20). 그러한 관점에서 ‘창조적 개입’ 개념을 정책 분석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연구들이 많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창조적 개입’을 통해 중국이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지역 분쟁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姚大學·閔偉 2012; 黑維清 2013; 談譚·陳劍峰 2015). 지역 분쟁에 대한 ‘창조적 개입’은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 실행에 있어서 중국은 분쟁에 개입된 국가들의 여러 정치 세력들과 접촉하여 대화의 창구를 구축하고 중재자가 지녀야 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구들과 다른 강대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 교수의 주장과 유사하게, 이들도 지역 분쟁에 대한 창조적인 개입을 통해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은 확장된 해외이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중국 국제정치학계에서 ‘창조적 개입’과 ‘건설적 개입’에 대한 관심과 관련 논의의 확대는 적어도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간섭 정책과 국제적 개입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느슨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점차 많은 수의 학자들이 불간섭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중국정부가 중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실용주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陳琪·黃宇興 2009; 甄妮·陳志敏 2014; 李志永 2015; 潘亞玲 2012; 龐中英 2015); 潘亞玲 2016; 周鑫宇 2015). ‘창조적 개입’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이유로 개입을 해야(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개입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개입을 철회해야 하는지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서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미묘한 의견의 차이들이 존재한다.

IV. 불간섭 정책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과 합법적 개입의 조건

최근 중국의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는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국제적 지위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중국의 전통적 외교원칙과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방향성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陳琪·黃宇興 2009; 甄妮·陳志敏 2014; 李志永 2015; 潘亞玲 2012; 龐中英 2015; 潘亞玲 2016; 周鑫宇 2015).¹¹⁾ 불간섭 원칙을 둘러싼 중국학계의 최근 논의는 중국이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중국은 어떻게 합법적인 개입의 방식과 조건을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불간섭 정책에 관한 논쟁에 참여하는 중국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는 불간섭 원칙을 포기하기보다는 그 정책에 대한 재고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간섭 정책과 국제적 개입을 둘러싼 중국 국제정치학자들의 현재의 관심은 불간섭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 이익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제한적 개입(有限干預)’과 ‘창조적 개입(創造性干預)’의 중국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²⁾

전반적으로, ‘제한적 개입’과 ‘창조적 개입’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발전과 인기는 중국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 하나의 느슨한 실용주의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불간섭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외교수사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교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¹³⁾ 그들은 중국이 기계적으로 불간섭

11) 중국 국제정치학자들(CSL_002, CSL_003, CSL_010)과의 심층 인터뷰. 2017년 1월, 2019년 6월. 중국 베이징.

12) 중국 국제정치학자(CSL_010)와의 심층 인터뷰.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

13) 중국 국제정치학자들(CSL_001, CSL_002, CSL_003, CSL_005, CSL_006, CSL_007, CSL_010, CSL_012, CSL_014, CSL_016, CSL_017)과의 심층 인터뷰. 2017년 1월, 2019년 6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정책적 적용 및 실행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적 개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과 방식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Chen 2016, 360). 이러한 측면에서, 불간섭 원칙과 정책에 관한 논쟁은 중국의 외교정책과 전략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논쟁을 반영한다(Zhu 2010; Xu & Du 2015).

중국 국제정치학자들 중에서, ‘책임 있는 대국(負責任的大國)’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긍정적인 국제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그룹은 국제 혹은 지역 다자기구에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다른 강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王江波 2013; 王逸舟 2011). 이에 반해, 또 다른 그룹의 학자들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상업적 이익을 수호하고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증대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해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愛思想』 2015/07/24; Yan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중동의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균형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상업적 이익을 수호하고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odement 2013). 따라서 이러한 그룹들은 불간섭 원칙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불간섭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합법적인 개입의 조건과 구체적인 개입의 방식 및 전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불간섭 원칙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불간섭 정책의 조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제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의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중국의 불간섭 정책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과 중국의 해외투자자와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한다(Chen 2016, 352-367). 심지어,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수단, 남수단, 나이지리아, 미얀마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소위 “조건 없는” 해외 무역과 원조,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진출 기업들과 관련 이해상관자들은 현지에서 어떠한 혜택이나 우호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음을 강조한다(謝奕秋 2010).¹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타국의 내정에 영향을 미

14) 중국 국제정치학자들(CSL_001, CSL_021)과의 심층 인터뷰.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

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취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人民日報, 海外版』 2013/06/14). 그들은 주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체제전환 시도를 우려하며, 2011년 나토(NATO)군의 리비아 내전 개입 이후 이러한 우려는 더 커졌다. 중국의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서구 강대국들이 UN의 권한을 이용하여 체제전환을 시도했다고 본다(Duchâtel et al. 2014, 7).¹⁵⁾

따라서 중국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 주요한 관심은 중국이 불간섭 원칙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국제문제에 참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상업적 이익을 더 잘 수호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학자들의 주요한 주장은 중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다르며, 자국의 협의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타국의 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강대국 상(像)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왕도(王道)와 패도(霸道)의 구분과 관련이 있으며, 중국은 왕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Zhu 2010, 23-26).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상업적 이익이 확장될수록, 이러한 구분에 따른 중국의 강대국 상(像)은 실제로 구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들은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 인식이 중국의 UN평화유지활동 참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원인 변수로 작용했음을 발견했다(Fung 2015).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는 불간섭 원칙과 정책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점차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정부가 불간섭 원칙에 대한 외교적 수사는 유지하되, 타국의 국내문제에 선택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외교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선택적 개입과 비(非)개입은 둘 다 선택가능한 정책적 옵션들이고,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Chen 2016, 356-360).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사례별(case-by-case) 접근에 따라, 최근 일부 중국 학자들은 ‘내정 간섭’과 ‘합법적인 개입’의 구분을 강조하고 구체화하려는 노

15) Ibid.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는 협의의 정의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중국이 타국의 경제와 정치 발전에 관여하고,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평화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내정 간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가 공식적인 중국의 입장으로 발전할지 여부는 아직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중국 내에 불간섭 원칙에 대한 재고와 개혁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⁶⁾ 중국이 불간섭 원칙에서 ‘내정 간섭’의 범위를 보다 좁게 정의한다면, 타국에서 중국의 합법적인 개입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외교부 관료인 루샤예(盧沙野)가 중국이 중재를 위해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실제로 아프리카 정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시사한 바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중국이 ‘합법적 개입(legitimate intervention)’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책임 있는 보호(負責任的保護)’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보호책임을 둘러싼 국제규범논쟁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좀 더 중국의 선호에 맞게 국제규범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책임 있는 보호’의 초점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좀 더 책임성 있고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직접 혹은 대리인들 통해 협상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한 외부적 지원은 이들의 결정을 보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阮宗澤 2012; Alden & Large 2015, 135). 따라서 이들은 평화건설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 중국 국제정치학자들은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의 대안으로써 ‘발전 평화(development peace)’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경제 발전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16) 중국 국제정치학자(CSI_010)와의 심층 인터뷰.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

중국의 학자들이나 관료들이 강조하는 ‘합법적 개입’의 주요한 조건은 UN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UN 결의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고, 당사국 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초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李志永 2015).¹⁷⁾ 하지만, 당사국 내 다양한 정치세력들 중에서 누구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특정 정치세력으로 부터의 요청에 따라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중국이 그 국가의 국내정치 적 분쟁에서 특정 집단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이 강조해 온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중국학자들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과 같은 지역기 구로부터의 국제적 개입에 대한 요청과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¹⁸⁾ 하지만, 이 경우 지역기구들 간에 권한의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리비아 내전에 개입할 당시, 아프리카 연합과 아랍연맹이 모두 선두에서 참여했지만, 아랍연맹이 개입을 합법화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했다(Hericksen & Larssen 2016).

합법적인 국제적 개입에 있어서 UN 결의의 필요성에 대한 중국의 강조가 약해진 이유에 대해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실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더 이상 소극적 태도와 무임승차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중국이 기존의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고 미국에 대항하여 보다 강경한 균형 정책을 펴고자 하는 유인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문제 참여와 국제적 개입에 대한 유인은 증대되었고, 반대로 그에 대한 비용과 외부적 제한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합법적인 개입에 있어서, 일부 중국학자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중국의 국가이익과의 관련 여부이다.¹⁹⁾ 여기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은 경제적·상업적 이익일수도 있고, 정치적·전략적 이익일 수도 있다. 즉,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개입은 국내적으로 정당화될 수

17) Ibid.

18) Ibid.

19) 중국 국제정치학자들(CSI_002, CSI_003, CSI_010, CSI_014, CSI_016, CSI_017)과의 심층 인터뷰. 2017년 1월, 2019년 6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적 지지와 합법성(legitimacy)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내적 정당성 확보의 문제는, 예를 들어 UN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중국 군인의 수 증가에 대한 중국 국내적 관심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개입 여부와 관련한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에서 중국정부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The Wall Street Journal* 2016/11/15).

요약하자면, 중국의 불간섭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은 점차 불간섭 원칙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불간섭 원칙과 정책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쟁은 ‘불간섭 원칙을 폐기할 것인가, 고수할 것인가’의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되 어떻게 그 원칙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제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간섭 정책을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논쟁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국가이익과 국내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국제적 개입의 조건과 방식을 모색하는 보다 광범위한 외교전략적 논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인 개입의 조건에 대한 중국 국제정치학자들의 최근 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국제적 개입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모든 정치세력과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들이 협상의 과정을 이끌고 중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들은 조력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와 안정을 이루거나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특정 집단을 지지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UN 결의나 당사국의 요청, 지역기구의 지지가 합법적인 개입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V. 결론

‘불간섭’은 중국이 1950년대 초부터 국제관계에서 고수해 온 가장 중요한 외교원칙 중 하나이다. 중국정부는 여전히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불간섭 원칙은 중국정부의 다양한 정치보고서, 정책보고서, 새롭게 조인된 외교성명에 일관적으로 삽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과 함께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국제적 개입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었고, 불간섭 정책의 유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 국내외에서 논쟁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을 둘러싼 중국 내부 인식과 담론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담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 어떠한 인식과 담론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의 불간섭 정책에 관한 논쟁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입장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첫째, 중국의 불간섭 정책의 변화(수정 혹은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비판적 입장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확장된 해외이익 수호,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평판(이미지) 개선을 근거로 국제적 개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간섭 원칙과 정책은 여전히 중국에게 유익하며 계속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다. 이들은 기존의 원칙과 정책을 유지할 때 얻어지는 이익과 정책 변화의 잠재적 비용이 그러한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대가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은 고수하되, 그 실행과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다. 이들은 불간섭 원칙과 정책을 둘러싼 상반되는 견해들 사이에 일종의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실용주의적 절충안에 대한 느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창의적 개입’, ‘건설적 개입’, ‘제한적 개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도 이러한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중국의 불간섭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담론은 점차 불간섭 원칙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불간섭 원칙과 정책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쟁은 ‘불간섭 원칙을 폐기할 것인가, 고수할 것인가’의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되 어떻게 그 원칙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제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간섭 정책을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논쟁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국가이

익과 국내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국제적 개입의 조건과 방식을 모색하는 보다 광범위한 외교전략적 논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인 개입의 조건에 대한 중국 국제정치학자들의 최근 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국제적 개입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모든 정치 세력과 집단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그들이 협상의 과정을 이끌고 중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들은 조력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와 안정을 이루거나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특정 집단을 지지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UN 결의나 당사국의 요청, 지역기구의 지지가 합법적인 개입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 지식인들의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내부의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들을 살펴보는 연구는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경향들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창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쟁의 흐름 속에서, 최근 중국정부는 불간섭 정책을 재고하고 정책 실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불간섭 원칙을 둘러싼 논쟁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정책 조정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간섭 원칙과 정책을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논쟁이 중국정부의 불간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제적 개입의 문제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서 과거 불간섭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던 입장에서 불간섭 원칙은 고수하되 그 적용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이동률 (2014). “중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주권 원칙의 딜레마.” 『중국연구』. 제60권, pp. 297-317.
- 이문기 (2014). “중국 싱크탱크의 발전 현황 및 특징: 국가 의존적 지식인-관료 협력 모델.” 『중소연구』. 제38권. 제3호, pp. 97-124.
- Alden, Chris and Daniel Large (2015). “On becoming a norms maker: Chinese foreign policy, norms evolution and the challenges of security in Africa.” *The China Quarterly*. Vol. 221, pp. 123-142.
- Chen, Zheng (2016). “China debates the non-interference principl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9. No. 3, pp. 349-374.
- Cohen, Jerome Alan (1967). “Chinese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Law—And Our Ow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1921-1969)*. Vol. 61, pp. 108-116.
- Deng, Xiaoping (1993). *Deng Xiaoping Wenxuan (Selected Works of Deng Xiaoping)*. Volume III. Beijing: Renminchubanshe (People’s Publishing House).
- Duchâtel, Mathieu, Oliver Brauner and Hang Zhou (2014). “Projecting China’s overseas interests: the slow shift away from non-interference.” *SIPRI Policy Paper*. Vol. 41.
- Etzioni, Amitai (2011). “Point of order: Is China more Westphalian than the West? Changing the rules.” *Foreign Affairs*. Vol. 90. No. 6, pp. 172-176.
- Fung, Courtney J. (2015). “What explains China’s deployment to UN peacekeeping oper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6. No. 3, pp. 409-441.
- Ginsburg, Tom (2010). “Eastphalia as the Perfection of Westphalia.”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7. No. 1, pp. 27-45.
- Henriksen, Dag and Ann Karin Larssen (eds.). (2016). *Political Rationale and International Consequences of the War in Liby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kenberry, G. John (2011). “The Future of the Liberal World Order: Internationalism after America.” *Foreign Affairs*. Vol. 90, No. 3, pp. 56-68.

- Pan, Zhongqi (2010). "Managing the conceptual gap on sovereignty in China-EU relations." *Asia Europe Journal*. Vol. 8. No. 2, pp. 227-243.
- Pang, Zhongying (2009). "China's Non-Intervention Question." *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Vol. 1. No. 2. pp. 237-252.
- Ruan, Zongze (2012). "Responsible Protection: Building a Safer World." *China International Studies*. Vol. 34. May/June.
- Smith, Tony (2012). *America's Miss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wide Struggle for Democr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ørensen, Camilla T. N. (2019). "That Is Not Intervention; That Is Interferenc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ew Concepts, Distinctions and Approaches Developing in the Chinese Debate and Foreign and Security Policy Practice." *The China Quarterly*. Vol. 239, pp. 594-613.
- Wang, Yizhou (2012). "Creative involvement. A new direction in Chinese diplomacy." Marc Leonard (ed.). *China 3.0*. Lond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p. 106-111.
- Xu, Jin and Zheyuan Du (2015). "The dominant thinking sets in Chinese foreign policy research: a criticis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8. No. 3, pp. 251-279.
- Yan, Xuetong (2014). "From keeping a low profile to striving for achievement."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7. No. 2, pp. 153-184.
- Zhu, Liqun (2010). "China's Foreign Policy Debates." *Chaillot Papers*. September.
- 高凜 (2015). "論國際法上不干涉內政原則的新挑戰." 『江南大學學報』. 第5期.
- 甄妮·陳志敏 (2014). "不干涉內政"原則与冷戰后中國在安理會的投票實踐." 『國際問題研究』. 第3期.
- 郭培清 (2007). "「不附加任何政治條件」原則之思考." 『二十一世紀』. 第66期.
- 談譚·陳劍峰 (2015). "創造性介入"与跨境安全治理——以湄公河慘案後續處理的國際合法律性為例." 『國際展望』. 第1期.
- 羅國強 (2006). "人道主義干涉的國際法理論及其新發展." 『法學』. 第11期.
- 羅艷華 (2014). "保護的責任"的發展歷程与中國的立場." 『國際政治研究』. 第0期.
- 郎帥·楊立志 (2016). "中國海外利益維護: 新現實与新常態." 『理論月刊』. 第11期.
- 黎鏞 (2018). "關於"不干涉內政原則"以及相關問題的評述." 『法制与社會』. 第6期.
- 雷志華·烏元春 (2015). "內外兼修,塑造國際影響力——專訪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副院長王逸舟." 『南風窗』. 第4期.
- 廖澄澄 (2014). "中國"戰略机遇期"之介入策略——評《創造性介入:中國全球角色的生成》."

『國際關係研究』, 第3期.

- 劉蓮蓮 (2017). “國家海外利益保護機制論析.”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 劉蕊 (2009). “論國際法上的不干涉內政原則.” 『法制與社會』, 第2期.
- 劉毅 (2013). “中國距離全球大國還有多遠——專訪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副院長王逸舟教授.” 『領導文萃』, 第19期.
- _____ (2014). “國際關係變革趨勢與中國外交進取思路——專訪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副院長王逸舟教授.” 『領導文萃』, 第13期.
- 劉中民 (2016). “中國的中東外交要彰顯中國特色.” 『當代世界』, 第2期.
- _____ (2018). “在中東推進“一帶一路”建設的政治和安全風險及應對.” 『國際觀察』, 第2期.
- 劉中民·范鵬 (2015). “對中國外交應對蘇丹達爾富爾問題的總結與思考.” 『國際觀察』, 第5期.
- 劉海方 (2011). “跨越術與道——《創造性介入》評析.” 『世界經濟與政治』, 第12期.
- 凌勝利 (2018). “中國周邊地區海外利益維護探討.” 『國際展望』, 第1期.
- 龐中英 (2015). “中國外交的“不”與“有”.” 『世界知識』, 第13期.
- 李明波 (2011). “中國外交需要“創造性介入”.” 『領導科學』, 第4期.
- 李伯軍 (2009a). “新帝國式干涉與國際法的危機.” 『求索』, 第3期.
- _____ (2009b). “論國際法上“內政”的概念及其發展.” 『法學評論』, 第2期.
- _____ (2014a). “全球治理:中國不干涉政策與國際法.” 『太平洋學報』, 第9期.
- _____ (2014b). “中國不干涉政策的演變過程.” 『求索』, 第2期.
- 李濱 (2013). “探索中國外交的“實踐智慧”——王逸舟的中國外交《創造性介入》兩部曲評介.” 『當代世界』, 第10期.
- 李衆敏 (2012). “中國海外經濟利益保護戰略芻論.” 『世界經濟與政治』, 第8期.
- 李志永 (2015). “規範爭論與協商介入:中國對不干涉內政規範的重塑.” 『當代亞太』, 第3期, pp. 146-154.
- 李欣 (2011). “《創造性介入:中國外交新取向》評介.” 『國際經濟評論』, 第6期.
- 毛國輝 (2013). “平民的國際人道法保護:困境與出路.” 『河北法學』, 第1期.
- 潘亞玲 (2012). “從捍衛式倡導到參與式倡導——試析中國互不干涉內政外交的新發展.”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
- _____ (2014). “國際規範更替的邏輯與中國應對.” 『世界經濟與政治』, 第4期.
- _____ (2016). “中國與“保護的責任”原則的發展.” 『國際觀察』, 第6期.
- 謝奕秋 (2010). “不干涉內政的困境.” 『南風窗』, 第1期, pp. 42-44.
- 徐慶超 (2016). “叩問“隱秘而偉大”的中國外交——評《創造性介入:中國外交的轉型》.” 『國際觀察』, 第2期.

- 蘇長和 (2011). “中國海外利益管理的新視角.” 『探索與爭鳴』, 8月.
- 楊澤偉 (2012). “國際社會的民主和法治价值与保護性干預——不干涉內政原則面臨的挑戰与應對.” 『法律科學』, 第5期.
- 吳京 (2012). “中國援非政策中“不干涉內政”原則的困境与反思.” 『法制与社會』, 第18期.
- 吳征宇 (2005). “主權、人權与人道主義干涉.” 『歐洲研究』, 第1期.
- 吳興唐 (2012). “國際形勢動蕩多變下中國外交應堅持“三不”原則.” 『当代世界』, 第4期.
- 阮宗澤 (2012). “負責任的保護: 建立更安全的世界.” 『國際問題研究』, 第3期, pp. 19-41.
- 王江波 (2013). “不干涉內政原則和中國的公共外交發展.” 『河南師範大學學報』, 第1期, pp. 25-27.
- 王發龍 (2014). “中國海外利益維護路徑研究: 基于國際制度的視角.” 『國際展望』, 第3期.
- 王帆·凌勝利 (2012). “對變革時代中國外交的創新性思考——評王逸舟力作《創造性介入——中國外交新取向》.” 『外交評論』, 第3期.
- 王逸舟 (2010). “中國維和應“創造性介入”.” 『中國報道』, 第2期.
- 王逸舟 (2011). 『創造性介入: 中國外交新取向』,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_____ (2012a). “創造性介入: 我心目中的中國新外交.” 『世界知識』, 第1期.
- _____ (2012b). “中國需要創造性介入國際事務.” 『時事報告』, 第6期.
- _____ (2012c). “國際大選年的中國應對——談“創造性介入”的中國外交戰略.” 『人民論壇』, 第10期.
- _____ (2013a). 『創造性介入: 中國之全球角色的生成』,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_____ (2013b). “發展適應新時代要求的不干涉內政學說——以非洲為背景并以中非關係為案例的一種解說.” 『國際安全研究』, 第1期.
- _____ (2013c). “創新不干涉原則, 加大保護海外利益的力度.” 『國際政治研究』, 第2期.
- _____ (2015). 『創造性介入: 中國外交的轉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王俊生 (2014). “中國全球角色的确立——兼評《創造性介入: 中國之全球角色的生成》.” 『太平洋學報』, 第5期.
- 王洪濤 (2008). “國際政治視角下國際人道法在冷戰后的發展.” 『國際關係學院學報』, 第6期.
- 姚匡乙 (2012a). “西亞北非動蕩与中國的政策.” 『國際問題研究』, 第3期.
- _____ (2012b). “中東劇變与中國中東政策.” 『阿拉伯世界研究』, 第4期.
- 姚大學·閻偉 (2012). “敘利亞政治危机与中國中東政策的調整.” 『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5期.
- 袁正清 (2011). “創造性介入——發現和凝練中國外交的新取向.” 『当代世界』, 第11期.
- 尹繼武 (2012). “中國外交創造性介入理念的知識譜系和研究議程.” 『國際關係學院學報』, 第5期.

- 章迪禹·王逸舟 (2012). “中國是否應加強介入國際事務——“創造性介入”與中國外交片段.”『世界知識』, 第2期.
- 張志洲 (2014). ““創造性介入”與中國的國際角色——評王逸舟《創造性介入》第二部.”『國際論壇』, 第1期.
- 張春 (2013). “中國特色外交理論的新探索——評《創造性介入——中國之全球角色的生成》.”『國際展望』, 第6期.
- 張忠祥 (2010). “試析中國對非洲外交中的不干涉內政原則.”『西亞非洲』, 第1期.
- 儲殷·程立耕 (2014). “中國外交的變與不變——論海外利益保護與“不干涉內政”原則.”『前線』, 第9期.
- 田文林 (2017). “地區格局變動中的中國特色中東外交.”『西亞非洲』, 第4期.
- 丁吉林·連希蕊 (2012). “創造性介入”提升中國外交軟實力——專訪北大國際關係學院副院長王逸舟.”『財經界』, 第1期.
- 趙華勝 (2011). “不干涉內政與建設性介入——吉爾吉斯斯坦動蕩後對中國政策的思考.”『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 周士新 (2013). “中國對中東變局的建設性介入.”『阿拉伯世界研究』, 第2期.
- 朱世龍·劉宣佑 (2009). “中國外交不干涉內政原則探究.”『教學與研究』, 第8期.
- 周鑫宇 (2015). “公共外交與國家的海外利益保護.”『世界知識』, 第3期.
- 曾愛平 (2016). “中國非洲治國理政經驗交流初探.”『中國非洲史研究會論文(2015)』,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252-273.
- 陳琪·黃宇興 (2009). “國際干涉的規範維度.”『世界經濟與政治』, 第4期.
- 陳積敏 (2014). “論中國海外投資利益保護的現狀與對策.”『國際論壇』, 第5期.
- 陳拯 (2013). ““建設性介入”與“負責任的保護”——中國參與國際人道主義干預規範構建的新迹象.”『夏旦國際關係評論』, 第1期.
- 陳拯·朱宇軒 (2015). “中國政府與“保護的責任”辯論: 基於安理會相關辯論發言的分析.”『當代亞太』, 第5期.
- 詹世亮 (2004). “不干涉別國內政和社會制度是國際關係新秩序最主要的原則.”『國際問題研究』, 第5期.
- 肖晞·郎帥 (2015). “中國海外利益維護與拓展模式構建探析.”『學習與探索』, 第9期.
- 馮維江 (2018). “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科學內涵、戰略布局與實踐要求.”『國際展望』, 第3期.
- 何光強·宋秀琚 (2013). “創造性介入: 中國參與北極地區事務的條件與路徑探索.”『太平洋學報』, 第3期.
- 叶淑蘭 (2012). “中國外交的理念創新與“中國特色”——評《創造性介入: 中國外交新取向》.”『國際政治研究』, 第3期.

黑維清 (2013). “創造性介入: 中國新型援非戰略的漸進轉型.” 『理論觀察』. 第12期.

2. 기타

바르톨로메우스 그릴. “검은 대륙, 걸어 가는 중국 그림자.” 『Economy Insight』. 2014년 1월 1일.

Godement, Francois (2013). “The end of non-interference.” *China Analysis*. October.

Page, Jeremy. “China discovers the price of global power: soldiers returning in Ca skets.” *The Wall Street Journal*. 2016년 11월 15일.

Wang, Yizhou (2012). “New Direction for China’s Diplomacy.” *Beijing Review*. 2012년 3월 5일.

Yan, Xuetong. “How Assertive Should a Great Power Be?” *New York Times*. 2011년 3월 31일.

Yu, Lintao (2011). “Calling for Transformation of China’s Diplomacy.” *Beijing Review*. 2011년 12월 20일.

劉武通. “不干涉內政原則不容踐踏.” 『光明日報』. 2012년 5월 22일.

劉峻凌. “外交部: 中方不干涉他國內政 也不許他國干涉中國內政.” 『中國網新聞』. 2017년 12월 11일.

劉中民. “中國中東外交得與失.” 『東方早報』. 2012년 1월 5일.

李江. “中國外交戰略為何轉變?” 『愛思想』. 2015년 7월 24일.

李靜. “西方“新干涉主義”危害無窮.” 『國際在線』. 2012년 2월 21일.

馬鑫·張萌. “中國外交“創造性介入——專訪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副院長王逸舟.” 『第一財經日報』. 2011년 12월 30일.

蘇長和. ““不干涉內政”不能動搖.” 『解放日報』. 2011년 4월 25일.

_____. “外交承認要講原則.” 『解放日報』. 2011년 9월 19일.

_____. “保護的責任”不可濫用.” 『解放日報』. 2012년 2월 8일.

安惠侯. “不干涉內政應堅持.” 『解放日報』. 2013년 12월 10일.

_____. “新干涉主義不得人心.” 『解放日報』. 2012년 3월 21일.

閻學通. “中國并非不能干涉別國內政.” 『中國新聞周刊』. 2012년 1월 16일.

吳思科. “不干涉內政不等于无所作為.” 『人民日報』. 2011년 5월 31일.

王嶠生. “中國外交的變與不變.” 『解放日報』. 2012년 10월 30일.

王逸舟. “中國應“創造性介入”海洋爭端.” 『環球時報』. 2012년 10월 13일.

王澤非. “堅持不干涉內政, 中國不輸理.” 『人民網』. 2012년 4월 27일.

任衛東. “小心“干涉別國內政”陷阱.” 『人民日報, 海外版』. 2013년 6월 14일.

- 田文林. “謹防“人道干涉”釀更大人道災難.” 『人民日報, 海外版』. 2012년 5월 31일.
_____. “西方使“中東劇變”成“中東亂局”.” 『中國國防報』. 2012년 2월 21일.
錢文榮. “需要維護和強化不干涉內政原則.” 『聯合早報』. 2012년 1월 12일.
鄭熙文. “不干涉原則并未過時.” 『東方早報』. 2011년 3월 29일.
鐘聲. “不能任由外部干涉實現政權更迭.” 『人民日報』. 2012년 7월 17일.
_____. “西方大國當為中東亂局負起責任.” 『人民日報』. 2014년 7월 31일.
周慧來. “中國應超越不干涉內政外交.” 『聯合早報』. 2010년 6월 24일.
韓云川. “人權保護還是“人道主義干涉”.” 『學習時報』. 2003년 9월 10일.
華黎明. “新版“人道主義干涉”.” 『解放日報』. 2011년 9월 2일.
- Wen, Jiabao (2004). “Carrying Forward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in the Promotion of Peace and Development.” https://www.fmprc.gov.cn/mfa_eng/topics_665678/seminaronfiveprinciples_665898/t140777.shtml. (2019년 9월 16일 검색)
- Zoellick, Robert B. (2005).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https://2001-2009.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 (2019년 9월 16일 검색)
- 邱林 (2013). “中國丟掉緬甸是捂不住的現實難題.” <http://qiulin.blog.caixin.com/archives/57998>. (2019년 9월 16일 검색)
- 盧沙野 (2012). “中非新型戰略伙伴關係的幾點思考.” <http://ias.zjnu.cn/2013/0122/c6147a116176/page.htm>. (2019년 9월 16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9년 08월 19일 |
| 논문심사일 : 2019년 08월 30일 |
| 게재 확정일 : 2019년 09월 17일 |

| ABSTRACT |

Chinese Intellectuals' Debate and Pragmatic Approach to Non-intervention Policy

Su-Jeong Kang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The “non-interven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principles China has adhered to in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the early 1950s. However, with the rise of China, the need for China’s international intervention has gradually expanded due to its changing international status and environment, and academic debates have emerged at home and abroad over the valid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f non-interventi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erception and discourse of Chinese intellectuals regarding this debate. Through the discourse analysis of the writings of Chinese intellectuals, especially political scientists,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China’s internal perspectives and orientations regarding its principle and policy of non-intervention. Through such analysi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are three main positions in the debate about China’s policy of non-intervention. The first is a critical position that raises the need for a change (correcting or scrapping) in China’s policy of non-intervention. The second is a conservative position that the existing principle is still beneficial to China and it should continue to adhere to the principle. And, the third is a pragmatic point of view that it calls for more creativity and flexibility in its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hese discourses of Chinese intellectuals are gradually converging into the third pragmatic approach. Thus, the debate within China over its policy of non-intervention is not focused on whether to scrap or adhere to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but rather on how to protect and promote China's expanding national interests, international status and role as a rising great power through more flexible and pragmatic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principle. In this light, the dispute among Chinese intellectuals over the policy of non-intervention can be seen as part of a broader diplomatic and strategic discussion in which China as a rising great power searches for the conditions and ways of legitimate international intervention to protect its national interests and to deal with the many new expectations and demands facing it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 Key words: China, Non-Intervention, International Intervention, Great Power, Foreign Policy